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안) 연구

2007.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자연환경국민신탁

문화관광부

연구책임: 이윤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

공동연구: 김연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현희(자연환경국민신탁 연구원)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양정필(경기지방공사 도시정책연구소 수석연구
원)
오창섭(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윤종영(한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정강화(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최범(디자인평론가)

목 차

제1부 하위법령을 위한 기초연구	1
제1장 연구의 개요	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3절 기대효과	4
제2장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5
제1절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방식	5
제2절 공공디자인 개념	1
제3절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범위	6
제4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9
제4장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3
제1절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의의	3
제2절 통합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절차	3
제3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2
제5장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
제1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임용	3
제2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업무	3
제3절 법률(안) 내용	6
제6장 공공디자인 공모	3
제1절 공공디자인 공모의 의의	3
제2절 공공디자인 공모대상	9
제3절 공공디자인 공모방법	9
제4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4

제7장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42
제1절 비용계상의 기본방향	42
제2절 공공디자인 사업대가 기준 모색	49
제8장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56
제1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미	56
제2절 연구·개발 지원사업	59
제3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68
제9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68
제1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68
제2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72
제3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74

제2부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안) 개발 ... 77

제1장 관련 법률들과의 비교 검토	78
제1절 디자인과 법	78
제2절 “공공”디자인 관련법제	82
제3절 공공디자인법(안)의 자리매김	99
제2장 해외법률 내용 검토	95
제1절 개요	95
제2절 주요국가의 법제	95
제3장 법률(안)과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3단 비교표	101

참고문헌 122



제 / 부

하위법령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Ⅱ 제 1 장 Ⅱ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소득증대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여유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누구나 다양한 심미적 안목을 가지게 되어 각 분야의 환경, 특히 공공분야에 대한 환경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원칙과 기준 없는 단순한 창조(물)의 권장과 그 나열은 오히려 무질서와 낭비가 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지역간 단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수립에 기인함.
- 따라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이에,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안)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가 이루어짐.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공적 공간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법은 그 대상을 각 구성객체별로 하고 있으며 아직 공간 전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부처간에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목적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정의 :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 적용범위 :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 시설, 용품, 표지 등
-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의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원칙
-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5년 단위
- 공공디자인의 협의 등
-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조례 및 계획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채용
-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국무총리소속, 당연직·민간위원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공공디자인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하위 규정, 즉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디자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私的 분야의 디자인은 논외로 하며, 여기에서는 소유관계를 배제한 公的(公共) 분야의 디자인으로 한정하여 논함.

-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 국내외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논문 및 인터넷을 통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함.

제3절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제정은 각종 개발과 사업으로 인한 경관의 파괴, 삶의 질 저하 등의 도시문제를 개선하고, 심미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제2장 Ⅱ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제1절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한 정의방식

- 현재 사용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함. 이는 곧 공공디자인이 아직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로서 발전가능성이 풍부함을 의미함.
- 공공디자인의 다양한 개념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됨.
 - 디자인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의방식
 - 디자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중점을 둔 정의방식

1.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의방식

- 이 방식은 디자인이 대상으로 하는 공간 혹은 공간 속의 시설물이나 제품, 이미지 등과 같이 ‘매체’에 주목하며, 그것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규정함.
-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정의방식은 다시 ‘공간과 시설물 중심의 구분방식’과 ‘보다 확대된 대상까지 포함하는 구분방식’으로 구분함.

※ 공간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 개념규정의 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한층 분화된 다세대사회가 발생되면서 개인적인 생활의 장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했다. 여기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다.”¹⁾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품, 산업디자인 등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설치·관리하는 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의 디자인을 말한다.”²⁾

※ 확대된 대상을 포함하는 공공디자인 개념규정의 예

“공공디자인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만들거나 설치, 소유,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 등을 말하며, 이밖에도 각종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나 여권, 주민등록증, 각종 상장과 증명서 그리고 행정서식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의 디자인을 말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의 건축시설물이나 미술장식품 및 간판 등과 같이 사적 영역에 있는 것으로 해당되지만 시민의 일상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강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지역의 디자인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³⁾

- 디자인이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대상영역 및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규정하지 못함
-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일부에서 공공디자인의 구체적 영역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이해방식은 ‘경제적 차원에서 산업을 위한 디자인(산업디자인)’을 일반적인 디자인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주체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과 다르지 않다는 오해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이는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동일한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해방식에서 파생된 해석상의 오류임.

※ 대상에 의한 구분의 난점

2007년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입법공청회 자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한 간부는 “양 법안(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성격 및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디자인 적용대상과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적용대상은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다면 중복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⁴⁾

-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규정될 경우, 디자인이 시장 논리에 포획되어 공공

1)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박찬숙의원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5년 10월, p.29.

2) <공공디자인문화포럼 창립행사 자료집>, 공공디자인문화포럼, 2005년 12월 8일, p.31.

3) 김영섭, “아름다운 거리풍경을 만드는 총체적 개념의 공공디자인법을 만들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자료집>, 2007년 2월 28일, p.67.

4) 김중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2007, p.78.

디자인이 가지는 고유의 ‘공공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매체가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발생함.

※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드러낸 예

“공공디자인 일수록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책의 제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⁵⁾

※ 그러한 위험에 대한 비판

“현대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기를 욕망한다. 구경꾼은 주어지는 스펙터클한 광경들을 수동적으로 소비할 뿐이다. 그러한 풍경들의 연출에 봉사하는 디자인은 우리를 무정신의 상태, 상품에 최면이 걸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디자인 사고는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마술’이라는 이해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디자인이 이러한 틀 속에서 이해되는 한,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규정되는 한, 공공디자인은 여전히 기능과 형태라는 전통적 틀 속에서 경제적 가치창출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공공디자인 없는 공공디자인이다.”⁶⁾

- 이미 존재하는 그린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모든 디자인이 매체에 의해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디자인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공공디자인은 매체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거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의방식

※ 가치와 태도에 의해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는 예

“또 다른 공공디자인이 공공디자인에는 자리한다. 그것은 문제제기로서의 공공디자인, 이를 통해 디자인의 완벽한 그림이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디자인이다. 그것은 헤겔적 의미의 ‘세계의 밤’⁷⁾을 불러들인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정치의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의 정치’를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한다.”⁸⁾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에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공공디자인은 무엇보다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인 것이다. 그 태도와 입장은 경제적 이윤창출을 유일한 가치로 설정하는 디자인 이해에 저항하며, 공공의 안녕과 행복한 삶에 주목한다. ... 이는 공공디자인이 조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문제들 속에서 정의됨을 의미한다.”⁹⁾

5) 이성식,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의견진술」, 2007. p.27.

6) 오창섭, “디자인의 정치로서 공공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가을학술대회 박사콜로키움 발표논문, 2006.

○ 공공디자인을 이윤창출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정의하는 방식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국가 브랜드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공적영역의 총체적인 문화활동으로 공공디자인을 접근하는 방법
- 한 국가의 공공영역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지향점이 명확히 다름.

※ 국가의 목적

“국가는 그 자체의 존립과 사회의 공공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는 그 자체로 공공디자인의 주요 시행주체로 자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지향점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내지 사적인 소비를 매개하는 산업디자인과, 사회생활 환경 전반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은 서로 명확히 구분됨
- 공공디자인은 그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서 간과되어 왔고 경제적 경쟁력 확보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생활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정의되어야 함.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있어서 시행주체를 그 중심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시행주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미
- 시행주체의 목적이 공공이익의 증진이므로,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는 것은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의방식의 한 형태임
- 주체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정의 방식은 대상(디자인 매체) 중심(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기존 분류) 정의방식과 구분됨
- 따라서,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국공립대학)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를 통하여 공공성, 즉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함.

7)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p.11.

8) 오창섭, 앞의 논문, 2006.

9) 오창섭, “타자와의 소통을 꿈꾸며”, 「쾌적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문화포럼, 2006년 2월 27일, p.72.

제2절 공공기관의 정의

1.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존 법령의 검토

- 현재 공공기관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1일 시행)이 존재하나, 공공기관의 범위와 업무 등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 기존 법령들에서 제시한 공공기관의 범위와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공공기관의 범위와 분류에 관한 법령 사례

법령	목적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방화관리의 적용대상 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 원칙을 준수할 주체 규정	가. 국가행정기관. 다만,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속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라. 국·공립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마. 대학병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주체 규정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주체 규정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무부과 대상 규정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함·협회를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2조(정의) 제7호	국가균형발전 정책집행 대상 정의	<p>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국가균형발전특별 시행령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6.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2 (국가기관등의 범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보기술자원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체 규정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법령분석을 통한 공공기관의 분류기준

- 기존의 법령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종합적인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순수 정부부문, 준정부부문, 준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음.

<표> 공공기관의 분류기준

공공기관의 분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제시한 법령	순수 정부부문		준정부부문								준민간부문	
	중앙 행정 기관 10)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¹¹⁾							국공 립 학교 12)	사립 학교 13)	사회 복지 법인 14)
			정부 투자 기관 15)	정부 산하 기관 16)	정부 출연 연구 기관 17)	정부 출자 기업 체 18)	법령에 의해 설립· 정부가 출연한 기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19)	대학 병원 20)			
국가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	○					○		○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		○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				

10) 관련근거:정부조직법

11) 관련근거: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2) 관련근거: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13) 관련근거:사립학교법

14) 관련근거:사회복지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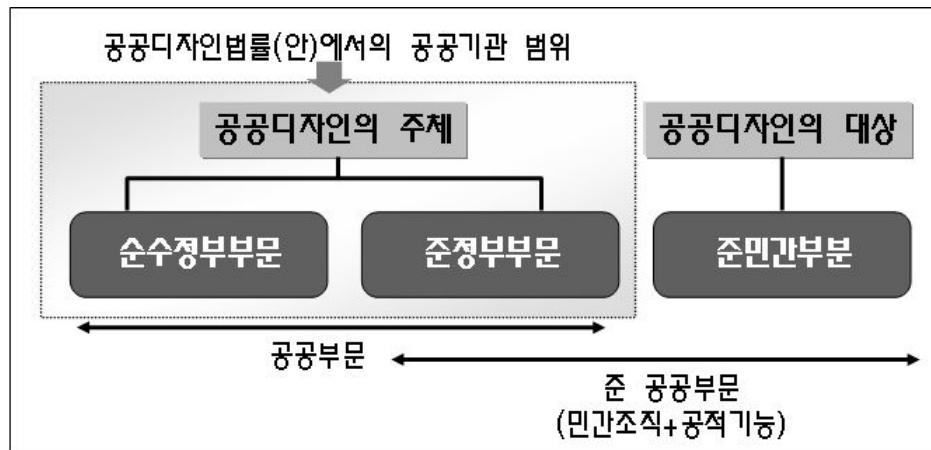
15) 관련근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07년 1월 폐지)

16) 관련근거: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7년 1월 폐지)

- 순수정부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순수한 정부부문
- 준정부부문 :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 은행, 공단 등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준민간부문 :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속하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익재단,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 순수정부부문과 준정부부문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에 관련된 영역이고, 준민간부분은 공공디자인의 대상과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법률(안)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디자인의 주체가 되는 순수정부부문과 준정부부문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



<그림> 정부부문의 구분과 공공디자인의 주체

- 본 법률(안)은 제2조 2항은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부문의 분류에 있어서 순수정부부문에 해당함.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준정부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준정부부문은 <표>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과 그

17) 관련근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8) 관련근거: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

19) 관련근거:지방공기업법

20) 관련근거:국립대학병원설치법

맥락을 같이하는 바,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본 법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정부부문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으로 국공립학교를 들 수 있음
- 국·공립학교에 대한 정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준함

※ 유아 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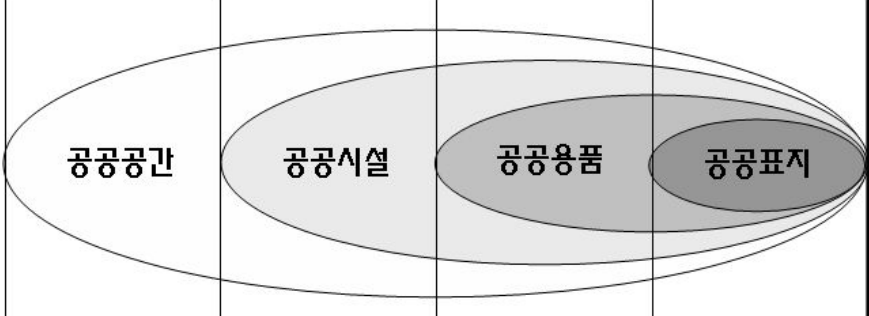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3절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

- 본 법률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디자인은 그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 공공디자인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다음 유형과 같이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 및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단계적 접근	다수가 접근가능한 사회문화적 공간	공공공간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공공간/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공공공간/시설/용품 에 부착되는 기호
공공디자인 대상의 구성도				
분류의 특징	공중 접근가능성	공중 사용가능성 (부동산)	공공/공중 사용가능성 (동산)	상호 전달가능성
분류별 종류	옥외공간 공공건축물 기타공작물	옥외관련시설물 공공건축물관련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물품 공공서식 대민서비스용품	국가상징물 국가인증물 교통안내표지 옥외광고물
관련 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실내/외 디자인 전시디자인 디스플레이 등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출판/편집디자인 패션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뉴미디어디자인 광고디자인 등

<그림> 공공디자인 분류 기준 및 특징

1 공공공간

가. 공공공간의 정의

- 공공공간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접근가능한(accessible) 사회문화적 공간”을 의미함.

-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 내지 공개성(publicity)을 가진 공간으로, 국민 모두의 보편적 활동에 대한 공동성(commonness)을 갖는 공간을 의미함.

나. 공공공간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1) 옥외공간

- 옥외공간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 야외장소”를 의미함.
- 지붕이나 벽이 없이 야외에 공개된 공공장소를 의미하며, 주로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인프라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등)²¹⁾에 하천, 가로²²⁾, 야외주차장 등을 포함한 영역 및 이와 유사한 공간을 포함함.

2)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을 의미함.
- 공공건축물은 국민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
- 즉, 건축법 제2조가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개개의 유형적인 건축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용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국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공간을 의미.
-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정부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등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 및 공설 화장시설 등이 포함.

²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참고(기반시설).

²²⁾ 가로(Street)는 도시나 마을의 주거지를 관통하는 보도와 차도를 포함(William Ellis, 1978, The Spatial structure of streets, on streets, ed., by Stanford Anderson, Cambridge : The MIT Press). 한편, 도로는 건축법상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제2조제11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함.

3) 기타 공작물

- 기타 공작물이란 “공공이 접근 가능한 공간 중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을 의미함.
-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 속에 인공적으로 제작하여 놓은 것”을 의미하며, 기타 공작물이란 옥외공간이나 공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여타의 공작물을 지칭함.

<표> 공공공간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분류	정의 및 종류	
옥외공간	정의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야외장소
	종류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하천, 가로, 야외주차장 등
공공건축물 ²³⁾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
	종류	-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연수원 등) -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의료원, 복지관, 학교, 연구소,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 정부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항, 항만, 운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동·식물원 등) - 공설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기타공작물	정의	공공이 접근 가능한 공간 중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종류	- 지하대피호, 첨탑 등

다. 공공공간 관련 법률

-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법률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공공공간 관련법률

항목	조항	대상
자연공원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공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항	놀이터, 광장, 보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항	공원, 광장, 놀이터, 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조제4조, 제6조-제11조,	공원, 광장,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²³⁾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별표 1)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제43조, 제46조, 제52조, 제68조, 제71조, 제78조	부속용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조	공원, 광장,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동묘지, 하수폐기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5조	공원, 광장, 공원시설(도로 또는 광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휴게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8항	공원, 광장, 공원시설(도로 또는 광장)
도시개발법	제5조제9항-제11항	도로, 복지시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항	학교시설, 문화재, 건축물, 문화시설, 보육시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항	문화재, 문화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주차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4-7항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원, 녹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녹지, 하천, 광장, 공동사용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지하 공공 보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 제11조-제12조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광장, 지하보행로
건축법	제2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묘지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시민회관),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
도로법	제2조-제3조, 제52조	자동차 주차장
고속국도법	제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3조	주차장, 정류소, 휴게소 및 관광시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3항, 제3조제1항-제2항	철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2항, 제18조제1항-7항, 제19조제1항-제6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1항-제3항, 제5항, 제5조제1항-8항, 제13조제1항,	철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항-제4항, 제7항, 제8항, 제6조제1항-제5항, 제9항-제11항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항	공항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7조	공원, 복지시설, 시민회관, 역사 공간,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항	역사공간, 문화재

2. 공공시설

가. 공공시설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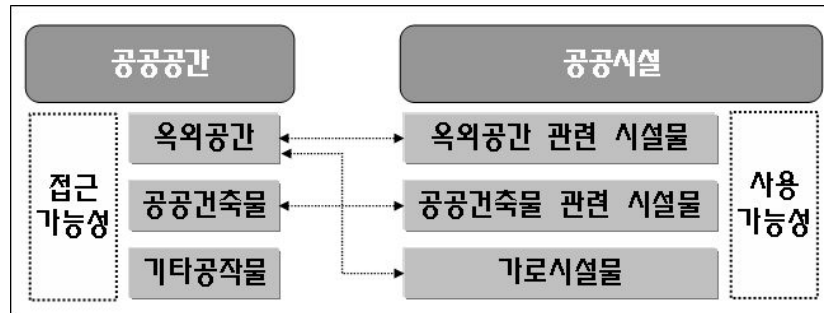
- 공공시설이란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가능(available) 하도록 공공공간 안에 설치되어 그 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물”을 의미함.
- 사실, 국내 법령에서 ‘공간’과 ‘시설’의 개념은 혼용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공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유원지를 문화시설로 분리하고 있는 등 공간과 시설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설이라는 개념이 더 일반적이나,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이라는 개념을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여기서는 다수가 접근가능한(accessible) 공공공간과 다수가 사용가능한(available) 공공시설로 구분함.

나. 공공시설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 공공시설은 공공공간의 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물로, 앞의 ‘공공공간’의 분류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음.

- 이하에서는 옥외공간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옥외공간 관련 시설물로,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공공건축물 관련 시설물로 구분함.
- 옥외공간 중 가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가로시설물은 통합적 관리가 시급하고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함.



<그림>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관계

1) 옥외공간 관련 시설물

- 옥외공간 관련시설물이란 “옥외공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옥외공간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의미함.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하천, 가로 등 옥외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 조경시설물(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시설물(휴게소, 매표, 화장실 등), 유희시설물(그네, 미끄럼틀), 관리시설물(매표소, 출입문, 울타리, 주차관리소 등), 문화관광시설물(관광안내소, 동상, 기념비 등) 및 도로구조물(교량, 철교,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이 포함됨.

2) 공공건축물 관련 시설물

- 공공건축물 관련 시설물이란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의미함
- 공동구(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안전시설물(승강기, 방재시설, 방화시설 등), 문화시설물(실내인테리어, 공공미술품 등)을 포함

3) 가로시설물

- 가로시설물이란 광의로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충돌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데에 거부감이 없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보행자들이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일정 공간에서 행위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기술적인 경관을 만드는 요소”를 의미함.
- 가로시설물의 법적인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다만, 설치위치에 따라 도로부속물, 구체적인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명시설, 자전거이용시설 등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에 혼선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 연구에서는 가로시설물을 교통관련시설물(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가드레일,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도블럭, 가로등 등), 편의시설물(휴지통, 공중전화, 벤치, 음수대 등), 가로녹지시설물(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등), 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시기반시설물(소화전, 맨홀 등)로 분류

〈표〉 공공공간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분류		정의 및 종류
옥외공간 관련시설물	정의	옥외공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옥외공간 내부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물(화단, 분수, 조각 등) - 휴양시설물(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 - 유흥시설물(그네, 미끄럼틀 등) - 관리시설물(매표소, 출입문, 울타리, 주차관리소 등)²⁴⁾ - 문화관광시설물(관광안내소, 동상·기념비 등) - 도로구조물(교량, 철교,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	정의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 안전시설물(승강기, 방재시설, 방화시설 등) - 문화시설물(실내인테리어, 공공미술품 등)
가로시설물 (기타 공작물 관련 시설물)	정의	가로활동을 지원하는 도시 경관요소로 거리에 설치되는 각종 장치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시설물(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가드레일,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도블럭, 가로등 등) - 편의시설물(휴지통, 공중전화, 벤치, 음수대 등) - 가로녹지시설물(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등) - 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 도시기반시설물(맨홀, 소화전 등)

²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참고(공원시설).

다. 공공시설 관련 법률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법률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공공시설 관련법률

항목	조항	대상
자연공원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주차시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조제2항	교통시설, 신호개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5조	공원시설(조경시설-화단,분수,조각 등 / 휴양시설-휴게소,인의자 등 / 유희시설-그네,미끄럼틀 등 / 운동시설 / 편익시설-주차장,매점,화장실 등 / 교양시설-식물원, 야외음악당 등 / 공원관리시설물-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 담장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8항	공원시설(조경시설-화단,분수,조각 등 / 휴양시설-휴게소,인의자 등 / 유희시설-그네,미끄럼틀 등 / 운동시설 / 편익시설-주차장,매점,화장실 등 / 교양시설-식물원,야외음악당 등 / 공원관리시설물-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 담장 등
도로법	제2조-제3조, 제52조	도로 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2	옹벽, 지하통로, 무넴기시설, 배수로, 도로의 부속물(방설시설, 낙석방지시설,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 지하도, 육교, 방음시설 등)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2항, 제3조제1항, 제3항, 제3조의2 제1항-제5항	철로, 보행등, 신호개폐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건널목개량 촉진법	제2조 1-3항	철로
관광기본법	제8조	관광안내시설, 인포부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7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3항, 제8조제1항-제3항	역사공간, 맨홀, 발전소, 전신주, 전력구, 분전반, 공중전화,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관개·배수시설, 우체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공중전화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제1항-4항, 제2조제1항-제2항	공중전화
----------------------	-----------------------	------

3. 공공용품

가. 공공용품의 정의

- 공공용품이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건과, 일반 국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동산(動産)”을 말함.
- 공공용품은 크게 공공물품, 공공서식, 대민 서비스용품으로 나누어지며,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와 같은 디지털 정보들은 공공서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함.

나. 공공용품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1) 공공물품

- 공공물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용품”을 의미함.
-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 제복, 가구, 문구, 등의 집기를 포함하는 개념임.

2) 공공서식

- 공공서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행정의 처리를 위해 작성, 접수 및 발급함으로써 국민과 공유하는 각종 문서의 양식”을 의미함
- 법정 민원서식(안내서, 신청서, 위임장, 각종 등본, 초본, 대장 등), 정부 간행물(도서, 도면, 정부 홍보물 등), 기타(홈페이지, 전자문서 등)의 양식을 의미함.
- 기관이나 신분의 진위를 증명하는 국가 인증물은 양식의 의미보다는 표지(상징적)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공공표지로 분류함.

3) 대민 서비스용품

- 대민 서비스용품이란 “국가가 국민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함.

-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혹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공공물품과 공공서식으로 구분됨.
- 재난대비용품, 민방위용품, 무인사무처리기 등이 포함됨.

<표> 공공공간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분류		정의 및 종류
공공물품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물품
	종류	- 공공기관 소유차량, 제복, 가구, 문구 등
공공서식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행정처리를 위해 작성, 접수 및 발급함으로써 국민과 공유하는 각종 문서의 양식
	종류	- 법정민원서식(안내서, 신청서, 위임장, 각종 등본, 초본, 대장 등) - 정부 간행물(도서, 도면, 정부 홍보물 등) - 기타(홈페이지, 전자문서 등)
대민 서비스용품	정의	국가가 국민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
	종류	- 재난복구 물자 및 자재, 무인사무처리기 등

다. 공공용품 관련 법률

- 공공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법률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공공용품 관련법률

항목	조항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공공기관 소유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3항, 제4조제1항-제3항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복
여권발급 여자공무원 복제	제1조,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2항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1항-제8항, 제28조제1항, 제3항- 제7항	각종 집기와 도구, 가구, 문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항, 제24조제1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항	국가소유 각종 집기와 도구, 가구, 문구, 제복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무인 민원처리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항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3항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배너(banner), 각종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미디어 아트, 벽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24조의2 제 1항-제3항, 제24조의 3 제1항-제4항, 제25 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항-제6항, 제12항, 제13항	
법정 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제1항- 제2항, 제3조, 제4조 제1항-제2항	제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5조	재난복구 물자 및 자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달물자(수요물자·비축물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항	

4. 공공표지

가. 공공표지의 정의

○ 공공표지라 함은 “공공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상징적

기호”를 의미함.

나. 공공표지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1) 상징물

- 상징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상징적 표지”를 의미함.
- 국가의전 상징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CI, 지역행사 상징물 등

2) 인증물

- 인증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그 신분과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보”를 의미함.
- 여권, 주민등록증, 자격증, 화폐, 우표, 자동차 표지판 등

3) 교통안내표지

- 교통안내 표지란 “교통안내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등”을 의미함.
- 경계표지, 이정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²⁵⁾ 등

4)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이란 “공개된 공간에서 공중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 ”을 의미함.
- 간판, 전광판, 현수막, 벽보 등

<표> 공공공간의 분류별 정의 및 종류

분류		정의 및 종류
상징물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 표지
	종류	- 국가의전 상징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CI - 지역 행사 상징물

²⁵⁾ 도로표지규칙 제2조(도로표지의 구분).

인증물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한 대상에 대해 그 신분과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보
	종류	- 여권, 주민등록증, 자격증, 화폐, 우표, 자동차 표지판 등
교통안내표지	정의	교통안내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종류	- 경계표지(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표지(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방향표지(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 노선표지(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 기타표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지 중 관광지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매표소표지 등) ²⁶⁾
옥외광고물	정의	공개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
	종류	- 간판,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다. 공공표지 관련 법률

○ 공공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관법률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공공표지 관련법률

항목	조항	대상
도로교통법	제1조제2항	교통표지판, 이정표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 제11조-제12조	지하 공공보도시설 광고물
도로법	제2조-제3조, 제52조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 구역표, 도로경계, 도로 표지
도로표지규칙	제2조, 제4조-제6조	도로표지
디자인보호법	제25조-제30조	국가상징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사인, 국가기관 상징사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 2	
상표법	제2조, 제6조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품, 포장, 환경, 시각디자인 대상 포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9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	

²⁶⁾ 도로표지규칙 제2조(도로표지의 구분)

행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제1항-제3항	보행등, 규제사인, 방향유도사인, 이정표, 교통표지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교통카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항7항, 제19조제1항-제6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1항-제3항, 제5항, 제5조제1항-제8항, 제13조제1항,	규제사인, 방향유도사인, 이정표, 교통표지판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자동차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관광기본법	제8조	지역안내도,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규제사인, 이정표, 교통표지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항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항	화폐, 채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항	

제4절 법률(안)과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와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표지(標識) 등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하위규정안

- 법률(안)은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공공디자인의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최소한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그 항목이 시행규칙에 일일이 규정될 수는 없음.
- 다만, 두 가지 입법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분류로서의 공공공간, 공공용품, 공공시설물, 공공표지에 관한 각각의 정의규정을 두고 하위 적용대상을 <별표>로 구체화하는 방법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의 적용범위 모두를 <별표>화 하는 방법이 있음.
- 후자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그 근거조문은 두어야 함.

Ⅱ 제4장 Ⅱ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제1절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의의

1.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역할 및 내용

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역할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기본계획임.
- 종합계획은 국가적 목표에 맞게 포괄적으로 수립하되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들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관리와 진흥이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방향성 있게 추진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시책과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내용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함.
 - 목 표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대한 목적 내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예: 지역별, 대상별, 사업별, 시기별 등)
 - 방 향 : 설정된 목표에 따른 추진원칙 내지 방향을 제시

- 사 업 : 기본계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하여 장·단기별로 현실적인 추진방법 내지 사업을 제시
- 예 산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및 자원조달방안을 편성

제2절 통합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절차

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협의기관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
 -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협의기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음.

나. 통합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절차

- 협 의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협의기관과 협의
- 심 의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심의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조례와 종합계획과의 관계

- 조례는 법령의 하위개념으로 전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비교적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개발의 지원과 관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하위규정안

가. 계획의 내용

- 시행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
- 법률(안) 제7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의 비용편익분석
 - 공공디자인 산업의 장기전망
 - 외국의 공공디자인 관련동향
 - 필요한 경우 표준조례안의 작성

나. 절 차

-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어야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안)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문화관광부가 관할하는 관련분야의 종합계획 뿐 아니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 등 다른 주무관청의 관할 하에 있는 종합계획과도 상충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야 함.
- 특히 공간 및 시설에 관하여는 경관법 제6조에 의한 경관계획과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임.

Ⅱ 제5장 Ⅱ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제1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임용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정의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말함.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Planning)하고 실행(Execution)하며 관리(Management)하는 역할을 수행함.

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가운데에서 임명함.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채용은 그 자격요건을 학위기준과 경력기준을 병행하여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함.
- 자격에 관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음.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임용방법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추천자를 임명함.
- 선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임용방침을 확정하고,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임용방침의 내용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자격, 조직 내에서의 위치, 직무 및 처우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제2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할

1. 공공디자인 정책의 수립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공공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제시된 정책 및 방향에 따라 사업의 방향, 규모, 우선순위, 구체적 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 계획을 수립함.
- 또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배치를 제안하고 업무를 총괄함.

2. 공공디자인 사업실행 및 조정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민간 등 이해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함.
- 한편, 공공디자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전문인력 외에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인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간, 규모, 복잡도 및 중요도에 따라 1인 혹은 다수로 구성되는 마스터 디자이너(MP : Master Designer)를 추천할 수 있음.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채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 하위규정안

가. 전문인력의 역할

- 필요한 조직과 인력배치를 제안하고 업무를 총괄함.
 - 사업방향, 규모, 우선순위, 구체적 예산 등 종합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전반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책임
-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행하고 의견을 조정함.
 - 공공디자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의 이해관계 조정
 - 사업의 기간, 규모, 복잡성 및 중요도에 따라 관련 전문가 활용

나. 전문인력의 배치

- 전문인력의 임명 :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또는 업무 추진 능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채용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핵심사업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Ⅵ 제6장 Ⅵ

공공디자인 공모

제1절 공공디자인 공모의 의의

1. 공공디자인 공모의 사회화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3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에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 공공디자인은 사회적 공공디자인과 적용대상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앞장섬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함.
- 단,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들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여기에 공모의 개최의 의의가 있음.

2. 공공디자인 공모의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공모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으로부터 공모의 방식으로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임.
- 공공디자인 공모의 취지, 절차, 특히 선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은 공공디자인의 홍보와 사회적 인식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제2절 공공디자인 공모대상 및 방법

1.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디자인 공모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에 관한 것이며, 각 대상별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2. 공공디자인 공모방식의 필요성

- 법적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그 시행주체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공간·시설·용품·표지는 공공디자인 공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i) 기존 디자인안의 단순 및 응용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전파를 위하여 시범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공모의 필요성 여부는 디자인안의 용도, 지역성 및 공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제3절 공모제도의 예

- 공공디자인의 공모 중에서 그 방법과 절차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건축설계경기 공모에 관련된 것임. 기타 한국건축가협회의 한국설계경기운영위원회에서는 법령과는 별도로 건축설계경기에 관한 운용규준을 정해 놓고 있음.

제4절 법률(안)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공모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1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하위규정안

- 법률(안) 제11조는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공모가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기존 디자인안이 단순하거나 그 응용이 부적절한 경우
 - 공공디자인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경우
 - 그 밖에 새로운 가치의 실현이나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공모대상

-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유형이나 대상을 제한할 이유는 없음.
- 공공디자인의 공모는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 제한공개 또는 지명초청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함.

나. 공모방법

- 공공디자인 공모에 있어서는 그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 우선, 참가자격, 추진일정, 디자인 조건, 입상의 내용 등 세부실시 계획은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되어야 하며, 공모기간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공모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과반수는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함.
-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모안은 일정 기간 전시한 후 응모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Ⅱ 제7장 Ⅱ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제1절 비용계상의 기본방향

- 공공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 비용의 계상방식의 기준 정립이 필요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디자인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비용계상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예와 같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명확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1. 적용대상

- 우선, 공공디자인 분야에 있어 활동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격 및 등록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와 같이, 활동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개념규정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자격 내지 등록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야 기회균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디자인 분야도 공공디자인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2. 구체적 사례

※ 사례 1 :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 실시

서울시는 벤치와 보도블록 등 시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통합키로 하고 표준디자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상공모 대상은 벤치와 쓰레기통, 보도블록, 맨홀 뚜껑, 가로 판매대, 자동차의 인도 진입차단용 기둥(볼라드) 등 6가지 시설물이다.

서울시는 공모에 앞서 오는 9월6일 공공시설물 디자인 통합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와 건축사무소에만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파이낸셜 뉴스 [2007.08.28.]

※ 사례 2 : 해반천 교량 경관조명시범사업 현상공모 공고

김해시 주요 조망대상지인 해반천 교량의 환경조형물 설치 및 야경연출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 및 우리시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해반천 교량 경관조명시범사업 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장[2005. 6. 22.]

1.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김해시 해반천 교량 3개소(연지교, 경원교, 봉황교)

나. 작품종류 : 교량별 환경조형물 및 야경연출 각1식

다. 작품규격 : 제한없음

라. 사 업 비 : 20억원 (설계 및 제작·설치비 등 포함) - 각 교량별 660백만원 정도

2. 작품내용

가. 김해시의 미래상, 찬란했던 가야문화의 역사성을 형상화하여 창작성과 조형적 가치가 있는 작품

나. 역사문화유적지와 김해신도시의 주변 환경 및 경전철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작품

다. 상징적 의미 연출을 위주로 하되 주변지역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웅장한 이미지를 표현

라. 가야문화 유적지간을 연계하는 야간이벤트 장을 만들어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야간의 여가문화를 창출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

3. 응모자격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자와 조명디자인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격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시공자격 보유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함.

1) 1억원이상의 조형물을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한 경험이 있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2) 1억원이상의 조형물을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미술분야 대학 전임강사 이상 재직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당선되어 제작·설치 경력이 있는 자

나. 위 “가”항의 자격을 중복 보유시 2인 또는 단독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단, 응모업체(개인)가 관련법에 의한 시공자격을 없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신청하여야 함.

3. 비용계상 방식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2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전체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적 설계부분은 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는 디자인 부문에 관한 비율을 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비용계상은 크게 '실비정산가액방식'과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춘 실비정산가액방식으로 정한다고 함.²⁷⁾
- 다만, 공공디자인의 각 분야, 즉 공간, 시설, 용품, 표지 등 대분류와 그에 따르는 소분류에 특성이 존재하므로 각 특성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할 것임.

²⁷⁾ 한국건설일보, “엔지니어링 대가 ‘실비정산가액으로’”, 2007년 10월 22일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본조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 표지처리부문 중 표지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4. 공공디자인 비용계상의 근거

-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근거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요율에 따라 설계비가 정해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지급되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공공디자인 활동주체에게 분배되어 디자인이 실시되어 왔음.
- 하지만 공공디자인 분야에 투자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우수한 디자이너의 영입을 어렵게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이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가지급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다만, 이 비용이 중복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경우 설계의 난이도,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등 추가업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지급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 등

제9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추가업무비용) ①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공공디자인 비용계상의 대상 및 비율

- 공공디자인에 대한 비용계상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간, 시설, 용품, 표지 분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분야에 대한 각 비용계상의 구분이 필요함. 예컨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말하는 ‘실비정산가액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비, 기술료로 세분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직접인건비 항목으로서 각각의 등급과 자격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임.
- 공공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서 전문 학회 및 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공디자이너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표〉 참고자료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2절 공공디자인 사업대가기준 모색

1. 법령에서 사업대가기준 제시방식

- 기존의 법률을 검토한 결과, 주로 관련 협회에서 대가가준을 수립하고 해당 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는 형식이며, 대가가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수립하여 공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공고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⑤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여 공고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 (사업대가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대가기준 대상의 단계별 분류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함.
- 공공디자인의 사업대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본디자인, 실시디자인, 디자인감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표> 사업대가기준 적용을 위한 공공디자인 수행단계

	디자인 기획	실시 설계	디자인 감리
정의	디자인의 컨셉을 수립하고 구상계획을 구체화하기 위 해 디자인의 범위를 결정해 서 기본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	합의가 된 도면을 기초로 실제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 서 및 문서를 작성하는 과 정	실시 설계에 기초하여 제 작, 설치 실시와와 연락, 조정, 지도 및 완성과 관 련된 과정
사례	디자인 개요 및 법령 등 각 종 기준 검토 디자인 컨셉기획 및 개발계 획 수립 설비계획 및 구조의 결정 아이디어 스케치 기본 디자인 도면 작성	최종 디자인 도면 작성 소재·설비의 결정 일반 시방서 제작설치비 예산서 및 공정 표 작성 프로토타입 ²⁸⁾ 제작 조언 프리프로덕션 평가	제조업자(시공업자)와 기 술적 조정 디자인 수정 및 변경 금형 및 공구를 검사·검수

* 한국산업디자인협회(1999)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방식과 디자인료 산출방식에 관한 연구」 참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참고.

3. 비용계상 방식

- 사업대가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한 위의 세 가지 사례 모두, '실비정산가액' 방식과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표> 법령별 비용계상 방식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측량용역대가기준
실비정산가액방식 과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 병행	실비정산가액 방식 과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 병행	실비정산가액 방식 과 사업비요율에 의한 방식 병행	실비정산가액 방식

- 해외에 있어서는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서비스대가산정시 실비정산가액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비요율 방식'을 병행하

²⁸⁾ 제작 도면에 기인하여 작성된 모델로 후의 양산품에 재료와 치수가 일치하고 있는것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가. 실비정산가액 방식

- ‘실비정산가액 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비와 디자인 창작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함.

1) 디자인 작업료

①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해당 업무의 종사자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종사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고 문화관광부장이 결정·고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²⁹⁾
- 직접경비의 산정은 공공디자인 실무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반드시 필요함.

② 직접경비

- 직접경비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및 재료구입비, 특수자료비, 모형제작비, 시안작업료, 제작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함.

③ 제 경비

- 제 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 여비, 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등이 포함됨³⁰⁾

²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통계법」 제4조의 조항에 근거함.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조사보고서에 따라 노임단가를 책정하고 있음.

³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제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제안하고 있음.

<표>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안)

기준 구분	학력 및 경험기준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치프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4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중급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³¹⁾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어시스턴트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본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인테리어디자인의 업무 및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참고.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1999), 「디자인용역 표준계약방식과 디자인료 산출방식에 관한 연구」 참고.

***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2001), 「국내 시각디자인 요율 표준화에 관한 연구」 참고.

2) 디자인 창작료

- 디자인 창작료는 공공디자인 업무에서 발휘되는 디자이너의 창조력·기획력·기술경험 및 정보 축적의 대가로서 기획료³²⁾, 디자인 라이선스료³³⁾, 저작권과 공업소유권 양도비, 기술료³⁴⁾,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함.

31) 한국고용정보원(2006),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전문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4.4년으로 나타나, 평균근속연수를 넘어선 5년차 학사학위를 가진 자를 중급디자이너 기준으로 삼았음

32) 기획료는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이나 프로듀서 등 지적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함.

33) 디자인 라이선스료는 디자인의 성과물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의 디자인 사용 허락 대가를 말함.

나. 사업비율 방식

- ‘사업비율 방식’은 사업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함.

1) 공공공간 · 공공시설

-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³⁵⁾의 “건설”부문의 요율을 사용함.³⁶⁾
- 사업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디자인·실시디자인·디자인감리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공간과 공공설비의 경우 기본디자인과 초기 실시디자인에 주로 해당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34) 기술료는 디자인 작업에 동반한 기술의 대가를 말함.

3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공간의 조성 과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36) 건설교통부는 공공디자인 중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이 건축법령의 ‘건축설계’와 일정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5.)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0.0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006822$ · 실시설계요율 $= 0.05 \times (\text{공사비})^{-0.0229}$ ·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Ⅱ 제8장 Ⅱ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제1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 추진 필요성

- 공공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조건임.
2006년 11월 8일 현재 박찬숙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
-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던 공공디자인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 공공디자인의 적용효과가 가시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인 공공디자인 운동으로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함.
- 공공디자인의 시범적용을 통하여 기존 디자인 관련사업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위상 및 효율적인 적용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

- 시범사업 선정기준
 - 시범사업과 관련된 법령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각종 법령은 시범사업 선정근거와 관련하여 일관적인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표> 기존 법령의 시범사업 선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1.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선정근거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역시 선정근거와 관련하여 유관 법령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기초하여 선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 법률(안) 제2조(정의)와 제3조(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라고 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은 법적 사업대상과 일치시키되, 공간, 시설, 용품, 표지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대상(공공디자인개선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의 조성,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도 시범사업에 포함.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 관련법령을 분석해 볼 때, 시범사업 지원방법은 재정, 행정, 기술,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관리와 밀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재정, 행정, 기술,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지원으로 정의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절차

가. 제출서류 및 평가

○ 시범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경우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임. 그러한 서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증명)하는 서류
- 시범사업계획서
- 지정을 요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범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내역
-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원회의 의견 등

<표> 기존 법령의 시범사업 지원시 제출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1. 시범사업계획서 2.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 이의 기존 법령의 관례를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이미 명시된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증명)하는 서류
- 시범사업계획서(시범사업의 내용, 소요예산, 사업계획 참여자, 자문위원 명단 포함)
- 지정을 요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범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내역서
- 주민의견청취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서류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평가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장 1인, 평가단장 1인, 총괄간사 2인, 4개 사업부문별 평가팀장과 평가위원 1명씩 총 8명, 현지심사팀장 등으로 구성함.
- 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당해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작성함.

나. 공공기관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 신청주체는 한 개의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사업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부문과 사업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 시범사업의 사업부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과제명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과제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등이 표현되어 있어야 함.
-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공공기관은 1개 사업부문 당 1개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개 사업부문까지 신청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 지원사업

1. 지원필요성

- 공공디자인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가 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를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공공디자인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연구 개발사업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에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및 공공디자인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공공디자인이 지역 브랜드를 넘어 국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대상

○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준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을 삼음.

<표> 기존 법령의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 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하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³⁷⁾
- 공공디자인 기초 확립을 위한 DB 구축
- 공공디자인 실행과정 개발
- 공공디자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 연구
-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및 품질관리 등의 평가방안 연구
- 국내외 모범사례 연구
-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연구
- 그밖에 유사한 연구

3,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절차

-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되, 두 가지 규정 중 보다 그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³⁷⁾ 문화관광연구원(2006),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

<표> 기존 법령의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p>가. 연구과제 평가단</p> <p>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p> <p>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p>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p>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연구개발사업의 공고</p> <p>제4조(공고 및 신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p>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p>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제출서류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p>※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p> <p>제13조(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 공공디자인의 연구·개발 3.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하위규정안

- 지원사업과 지원범위·절차 등은 각 사업의 유형과 연구·개발의 내용, 국제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별표를 통하여 문화관광부의 예산에 따른 비율과 지원대상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음.

Ⅱ 제9장 Ⅱ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제1절 공공디자인 관련위원회의 현황

○ 영역과 범주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공공디자인의 특성상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이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에 조직·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건축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등

1.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 근 거 :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년 3월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됨.

○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
원부장관·표지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균
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업 무 : 위원회는 문화중심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이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의 영역 중 공공공간 및 공간시설
이 중복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공공공간 및 시설의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설립 자체와 운영에 대해 중점을 두어 다
루고 있으므로, 디자인 자체를 다루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과는 명백히 구별됨.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근 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관련 중요정
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조직됨.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됨.

○ 업 무 :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3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시책 중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넓은 목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제1조)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조) 등은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 성 :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 업 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사사항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의 유형과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그것과 중복될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공공디자인에 관한 계획 및 사업과 유기적인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라. 중앙건축위원회

○ 근거 :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 산하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업무 : 중앙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같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중앙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및 제한, 완화, 예외사항에 대한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 특히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됨.
-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계획, 사업 등의 내용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지방정부 산하 위원회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 참조

나. 지방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내용 참조

다. 경관위원회

- 근 거 : 경관법(2007년 11월 18일 시행)에 근거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구 성 : 경관법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업 무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³⁸⁾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경관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경관법은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에서 공공용품이나 공공표지를 제외한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은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계획, 사업, 협정 등과 중복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역시 공공디자인조례와 그 적용영역에서 중복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음.

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근 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³⁸⁾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업 무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광고물의 표지금지 지역·장소에 대한 심의
- 옥상간판 표시 지역·장소에 대한 심의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광고물이 설치 또는 금지되는 지역·장소에 대한 심의와 광고물 설치 예외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광고물의 종류와 형태, 색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 조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디자인 및 조화에 대한 심의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광고물은 공공디자인의 범주 중 공공표지에 해당하며, 광고물의 설치는 공공공간에 해당되므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나, 디자인 및 조화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 보완이 가능함.

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업 무 :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³⁹⁾(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

³⁹⁾서울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

-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다. 방음벽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물을 포함함)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한 면의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대형광고물(신규, 장소이전, 면적확대 설치를 포함)의
규격·색상 등 지역 간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 권고
- 그 밖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권고
- 그 밖에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과의 관련성

-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서울의 공공디자인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방공공

-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라. 동상·기념비 등(「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정용허가대상 시설물 (미관지구 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한함)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 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디자인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보아도 무방함.

- 행정시설 등 공공디자인의 영역 중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 근 거 :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시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조성 중임.
- 업 무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공공디자인의 대상시설물⁴⁰⁾(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 포함)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디자인위원회와의 관계

- 공공디자인의 영역별로 관련되는 위원회 역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공공디자인 영역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
전국 대상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시책 중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심의 등	○	○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기본계획(기반시설 및 경관 계획 포함 종합계획) 심의, 도시관리 계획 심의 등	○	○		○
	중앙건축위원회	건축물 인허가 및 제한, 완화, 예외 사항 심의 등	○	○		

⁴⁰⁾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서 규정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 중 버스전용차선 단속도로를 제외한 전 시설을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로 정함.

지역 대 상 위 원 회	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회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중요시 설의 건립 및 운영 심의 등	○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기본계획(기반시설 및 경관 계 획포함 종합계획) 심의, 도시관리계 획 심의 등	○	○		○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물 인허가 및 제한, 완화, 예외 사항 심의 등	○	○		
	경관위원회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심의 등	○	○		○
	광고물 심의관리위원회	광고물의 설치 또는 금지되는 지 역·장소에 대한 심의, 광고물 설치 예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심의,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 행 심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조언·권고,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	○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위원회 (광주광역시, 구리시 등)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심의,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 행 심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조언·권고,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자문 등	○	○	○	○

- 공공디자인의 영역 중 공공공간·공공시설·공공표지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자문·심의·조사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공공용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음.
- 관련 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중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 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조정	
중앙 정부 산하 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	⇒	공공디자인 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공공디자인 포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 이양 및 공조

	중앙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
지방 자치 단체 산하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	·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 이양 및 공조
	지방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대행
	경관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역할 대행
	광고물심의관리위원회			· 광고물의 규격 색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담당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역할 대행
	광주광역시, 구리시 등 공공디자인위원회			·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로 역할 수행

제2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1.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내용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며, 지역공공디자인시행계획,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공공디자인의 역할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법령 중 관련 위원회의 역할 대행

- 많은 부분 중복되는 경관위원회의 경우 경관법 시행령을 통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조사 사항 중 공공디자인의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심의하도록 함.

② 공공디자인의 비용계상

- 공공디자인 비용 계상의 대상 및 비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③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④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보완

-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⑤ 기 타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위원의 임기 및 제적사유
-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① 위원의 임기 및 제적사유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루어짐.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서 제적되도록 할 것이 필요함.

-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자기가 당사자와 친척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에 대한 자문·고문으로 있는 경우
-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건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범주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공공공간 : 건축물, 공원, 광장 등의 공간 및 경관 분야
- 공공시설 및 용품 : 교통, 편의, 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제복, 집기, 가구 등의 용품 분야
- 공공표지 : 옥외광고물, 안내판, 신분증, 화폐 등의 표지 분야

○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함.

③ 전문위원의 위촉

○ 전문위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음

제3절 법률(안) 위임내용

1.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디자인 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4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및 조정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자가 공동으로 한다.

③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장
2. 민간위원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계획,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하위규정안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당연직 위원 : 공공디자인의 성격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직 위원은 적어도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장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함.
-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각 분야에 상응하도록 기획위원회, 공간위원회, 시설위원회, 표지위원회, 용품분과위원회, 지방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제 2 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안) 개발

Ⅱ 제1장 Ⅱ

관련법제의 비교 검토

제1절 디자인과 법

1.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法源

가.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20조 및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동 조항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영역인 공간, 시설, 용품 및 표지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그 목적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므로 그 입법취지 상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에서도 그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기본원리로 인정됨. 문화국가란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함.
-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의 그 초점은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음. 그러한 문화풍토의 조성은 ‘개입’이나 ‘규제’가 아닌 ‘조성·육성·진흥·계승·발전·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결국 국민의 환경권,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국가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규정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⁴¹⁾

나. 법률적 근거

-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에 관한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할 경우, 각 부문에 관련된 법률도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음.⁴¹⁾
- 이하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하위 법령안에서 작성될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참조하였음.
- 아래의 많은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객체만 보아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법률이 목적하는 바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향하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중복된다고 표현할 수 없음.

1) 공간과 관련된 법령

① 야외공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동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건축법, 동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② 행정공간

- 건축법, 동법 시행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4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p. 184-185.

42)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6. p.43-134.

③ 문화·복지공간

- 건축법, 동법 시행령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④ 역사시설공간

- 건축법, 동법 시행령
-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신항만건설촉진법

⑤ 교육·연구공간

- 건축법, 동법 시행령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시설과 관련된 법령

① 교통시설

-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규칙
- 도로법, 동법 시행령
- 고속국도법, 동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동법 시행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 유료도로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농어촌 도로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편의시설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동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③ 공급시설

- 공중 전화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동법 시행령

3) 용품과 관련된 법령

- 법정 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동법 시행규칙
- 산업디자인진흥법, 동법 시행령
-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 여권발급 여자공무원 복제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4) 표지와 관련된 법령

- 도로표지규칙
-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절 주요 관련법제와의 비교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가.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발전

- 종전에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던 것을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함.
- 2003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약 17회의 빈번한 개정을 거쳤으나 건축법과의 관계 정립 등에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나. 국토계획법의 성격 및 주요 내용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법은 (i)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ii)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iii)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iv)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v)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vi)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vii)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제3조) 하에 국토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함.
- 이 법은 정의규정(제2조)에서 “기반시설”을 (i)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ii)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iii)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iv)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v)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vi)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vii)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정의함(제6호).

- 그리고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지칭함(제9호).
- 또한,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정의함(제11조).

다.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의 관계

○ 목적에 있어서의 차이점

-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법률(안)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두 법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궁극적인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두 법의 목적만으로 볼 때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적용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

- 국토계획법은 그 법명에서 보듯이 국토를 대상으로 그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함. 국토계획법에서의 국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되고 각 구분의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용 또는 관리됨.
-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국토 내지 지역이라는 한정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전제 하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국토디자인임에 반하여, 공공디자인은 국토라는 범위를 탈피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관리하는 공간 및 시설 등에 이루어지는 “실질적” 디자인이라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관련기관에 있어서의 차이점

- 국토계획법을 관장하는 부처는 건설교통부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둠.
-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건교부 소관의 약 10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업무로 함.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기구로서 도시계획에 한정됨이 없이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관리)계획의 내용에 공공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2. 디자인보호법

가. 디자인진흥법의 제정과 발전

- 1961년 제정된 디자인보호법(당시 의장법)은 특허국의 설치,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이 의장에 관한 사항과 혼합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상 불합리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 법에서는 의장, 즉 디자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자 하였음.
- 1973년 전문개정은 공업소유권 관계의 기본법인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바, 특히 공무원의 직무고안에 대한 보상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의장의 본질에 비추어 기술적인 창작에 속하는 것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관상 심미감이 있는 창작에 한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음.
- 2004년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함.

나. 디자인보호법의 성격 및 주요내용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디자인의 등록과 등록출원에 관한 요건(제2장) 및 절차(제3장 내지 제4장), 디자인권(제5장) 및 디자인권자의 보호(제6장)와 분쟁관계(제7장 내지 제8장)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디자인(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 디자인 보호법은 개인의 디자인에 관한 (배타적)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전형적인 私法의 성격을 가짐. 개인적 재산권 뿐 아니라 그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개인과 행정기관(특허청장)과의 공법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디자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다.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의 관계

-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
 - 디자인보호법은 전형적인 사법에 속하지만,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법의 영역에 속함. 따라서 양 법을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하는 점은 무리가 있으나, 이 하에서는 차이점만을 논함.
-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점
 - 후자에 있어서 관리 및 진흥이라는 주요 정책의 수범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를 통하여 개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체에 관한 한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범위는 전자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
 - 전자의 경우 개인의 지적 재산을 배타적인 물권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법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사회전반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후자와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름.
- 관련기관에 있어서의 차이점
 -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리자에 대한 특허관계 및 디자인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재심 및 소송의 경우를 예정하면서 행정 및 사법기관의 개입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후자는 공공디자인의 적정한 조성·관리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3. 산업디자인진흥법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정과 발전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기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977년 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제정되었음.
- 1991년 산업진흥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낙후된 산업디자인 및 포장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법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라 하고 전문개정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법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에서 포장용기 및 제작기술분야는 제외함.

나. 산업디자인보호법의 주요내용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흥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함(제2조).
- 이 법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기에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제3조)과 그 효율적 실시를 위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제4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제5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제6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제9조)과 산업디자인의 보호(제10조)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제11조)의 근거를 두고 있음.

다.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의 관계

○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

- 두 법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에서와 같이 한편으로 중복될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차별적일 것 같기도 한 선입견을 가지게 함.
- 그러나,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은 국가의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되는 산업디자인진흥법과는 전혀 다름.

○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점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지만,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주체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산업디자인의 주체는 산업분야의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음. 양 법은 주체에 관한 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

○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차이점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제품, 포장, 환경, 시각디자인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지만,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간, 시설, 용품, 표지 등 전자의 그것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음.

○ 관련기관에 있어서의 차이점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무관청은 산업자원부이며,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두고 있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각종 사업을 행하고,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부가 관할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름.

4. 경관법

가. 경관법의 제정

- 경관법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음(제1조).

- 이 법에 의하면 경관의 관리는 (i)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ii)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iii)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iv)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v)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제3조).

나. 경관법의 주요내용

-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상의 건축물을 말함(제2조).
-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내지 제15조).
-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함(제16조·제18조 및 제22조).
-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경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다.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의 관계

○ 목적에 있어서의 차이점

-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두 법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경관법은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라는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공공디자인법(안)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을 중점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차이점

- 경관법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공공디자인법(안)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제6조), “공간”에 관한 한 양 법의 적용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관법은 건축물을 포함한 경관이라는 일단의 공간적 범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개개의 구성요소를 디자인하는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양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과 적용대상을 달리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공간이나 시설에 관하여도 상호 중복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기관에 있어서의 차이점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음(제23조).
- 경관위원회는 (i)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ii) 경관계획의 승인, (iii) 경관사업의 승인, (iv) 경관협정의 인가, (v)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또한, (i)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ii)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iii)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iv)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v) 경관

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vi)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함.

- 경관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서 자치화 되어 있고 심의 및 자문에 응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법률이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한편,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률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 그간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개별 법령 및 관리부서의 상이함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기적 관리체계의 미흡,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물과 형식적인 도시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추진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시정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 도시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통합 디자인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뉴타운(구 도심 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 시기에 맞춰 그동안 도시의 소외감을 가져왔던 뉴타운 사업지구를 주요 거점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관련 조례(안 포함) 등의 입법예고 현황
 - 서울시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제2조),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제1조).
 - 구리시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한 구리시는 그간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2007년 3월 2일 정책추진단에 도시디자인 업무를 신설, 4월 2일 구리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 조례는 특히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

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이라는 “야간경관조명”의 개념을 두어(제2조) 서울시와 같이 야간경관에 비중을 두고 있음.

- 파주시 : 홍익대학교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세련미와 편리성, 안전성을 반영한 선진국형 도시 시설물을 개발해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함.⁴³⁾
- 광주광역시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가장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보이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제5조)고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조례에 배타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임.
- 기 타 : 그 외에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영동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마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조례가 아닌 ‘훈령’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된 디자인관련규정으로 충청남도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⁴⁴⁾ 아산시도시경관디자인심의운영규정,⁴⁵⁾ 충청북도산업디자인실운영규정⁴⁶⁾ 등이 시행 중에 있음.

제3절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자리매김

1.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성격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간, 시설, 용품, 표지에 대한 관리 및 진흥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성격상 공법에 속하며, 그 수단은 규제가 아닌 관리, 조성 및 진흥에 있음.

○ 다만,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자가 사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43) 연합뉴스, “구리시 조례제정...의정부시 전담부서 설치”, 2007년 7월 6일자.

44) 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정체성확립을 위해 충청남도가 개발한 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 규정은 충청남도과 관련된 각종 서식, 증서, 인쇄, 물품, 장비 등에 적용한다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음 2조).

45) 이 규정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46) 중소기업지원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산업디자인실은 (i) 도내 중소기업 및 영농조합 등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디자인(제품·포장)의 개발지원과 (ii) 도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정홍보·포스터·책표지 등 행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개발지원을 그 기능으로 함(제2조).

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하며, 공공디자인이 산업화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디자인진흥법과도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한편, 경관법의 적용대상 및 경관계획은 공공디자인의 그것과 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법은 목적과 방법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복될 여지는 적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등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어느 법에 따라 조례를 수립하느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지역의 특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사항임.

2.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 이 법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디자인이 국가의 이미지 내지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목표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나. 정 의

-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지칭하고 있음(제2조).
-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私的 재산권의 대상인 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의 그것과 명백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디자인과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범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공공디자인이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다. 적용범위

- 이 법은 국가지역 상징, 공원 등 공간, 교량 등 시설물, 각종 제복 등 용품, 이정표 등 안내홍보물, 각종 증명서 및 서식 등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표지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제3조).
- 장기적으로 볼 때 하위법령 상의 적용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공간과 시설, 용품, 표지는 법률로서 정의를 두고 하위법령에서는 그 구체적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개념의 막연함 내지 추상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라. 계획의 변경

-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7조).
-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은 사정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비하는 규정이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변경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함.

마. 조 례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제9조). 광주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그 대표적인 예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헌법(제117조)과 법률(지방자치법)⁴⁷⁾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이 법에서 따로 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됨.
- 더욱이 자치입법의 가능성을 개방하면서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공공디자인을 인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관리

47)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5호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내지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바. 시범사업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이라는 표제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제13조).
-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이지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표제어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함.
-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사. 조 직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민간위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됨(제14조 및 제15조).
- 개념상 민간위원에 대응하는 위원은 정부위원이며, 당연직위원에 대응하는 그것은 위촉위원이라고 할 수 있음.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을 혼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음.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일정 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의결에 대하여도 규정이 있어야 함.

Ⅱ 제2장 Ⅱ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1절 개 요

-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제2호)
 - 적용범위(안 제3조제2항)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7조제6항)
 - 공공디자인안의 공모(안 제11조제3항)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안 제13조제2항)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 이하에서는 제1부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 본 하위법령(안)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구성함.

제2절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범위(법안 제2조제2호)

- 법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시행령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함.
- 즉,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⁴⁸⁾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
-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 적용범위(법안 제3조제2항)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안 제3조제1항의 공간, 시설, 용품, 표지를 각각 정의함.
- 공 간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접근이 가능한 사회문화적 공간
 - 시 설 :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그 용도를 증진시키는 시설물
 - 용 품 :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일반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 표 지 : 공공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상징적 기호
- 법안에서 구체적 대상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기에, 사실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야 하나 그 목록을 모두 시행령에서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표로 규정하도록 함.
- 현 시행령(안)은 공간, 시설, 용품, 표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것이고, 그 대상과 범위에

48)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별표로 처리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대상과 범위의 기준이나 목록을 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개념 속에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대상과 범위, 예컨대 공간을 옥외공간·공공건축물·기타공작물로, 시설을 옥외공간 관련시설물·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가로시설물로, 용품을 공공물품·공공양식·대민서비스용품으로, 표지를 상징물·인증물·교통안내표지·옥외광고물로 분류 내지 범위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네 영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

① 공 간

- 옥외공간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야외장소로서, 국토계획법상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주차장 등
- 공공건축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청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항, 항만, 운하, 소방서, 시민회관, 의료원, 박물관, 도서관 등
- 기타 공작물 : 공공이 접근 가능한 공간 중 옥외공간이나 공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로서, 지하대피호, 침탑 등

② 시 설

- 옥외공간 관련시설 : 옥외공간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조경시설물, 휴양시설물, 유희시설물, 관리시설물, 문화관광시설물, 도로구조물을 포함
- 공공건축물 관련시설 :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공동구, 안전시설물, 문화시설물이 포함
- 가로시설 : 교통 및 보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장치로서, 교통관련시설물, 편의시설물, 가로녹지시설물, 상업시설물을 포함

③ 용 품

- 공공물품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공공기관소유 차량, 제복, 가구, 문구 등 집기
- 공공양식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행정처리를 위해 작성, 접수 및 발급하여 국

민과 공유하는 각종 문서의 양식으로, 법정 민원서식과 정부간행물, 홈페이지와 전자문서를 포함

- 대민서비스용품 : 국가가 국민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재난대비용품과 무인 사무처리기 등

④ 표 지

- 상징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표지로서, 국가의전 상징물, 공공기관의 CI, 지역행사 상징물
- 인증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그 신분이나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보로서, 여권, 주민등록증, 각종 자격증, 화폐, 우표, 자동차 번호판 등
- 교통안내표지 : 교통안내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에 표시하는 기호 및 문자로, 도로교통법상의 경계표시,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등
- 옥외광고물 : 공개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표시되는 정보로서 간판, 전광판, 현수막, 벽보가 포함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안 제6조) - 비 위임사항

-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리하여 디자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두 법, 즉 디자인의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디자인보호법을, 디자인의 산업화와 관련하여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문제는 경관법과의 관계인데,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듯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법률로서 그 적용상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법령을 통하여 양 법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4.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등(법안 제7조제2항제5호)

-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률(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각 법률이 정하는 종합계획에는 (i) 비용편익분석, (ii) (산업화의 경우) 장기전망, (iii) 모델코드로서의 표준조례안, (iv) 외국의 관련동향이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공청회 - 비 위임사항

-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는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절차가 필요함.

6.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법안 제7조제6항)

-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종합계획, 특히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은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공공디자인의 협의 등(법안 제8조) - 비 위임사항

-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조화를 위하여 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에 그 내용을 규정할 것이 필요함.
-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의 조화에 관한 협의는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 및 일정 등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덧붙여 회신하여야 하고, 그 소명자료를 검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할부담·비용부담·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8. 지역의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계획(법안 제9조제1항, 제2항)

- 비 위임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디자인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다른 시책 또는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산업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및 계획과 공공디자인조례 및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한편,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범적 구상 또는 표준안을 공표할 수 있음.

9.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채용(법안 제10조) - 비 위임사항

-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또는 업무추진능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함을 규정함.
- 전문인력의 임무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그 임명, 직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 시행령(안)은 자격요건과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본 연구를 통한 하위법령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10.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법안 제11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모가 필요한 경우는 (i) 기존 디자인안이 단순하거나 그 응용이 부적절한 경우, (ii) 공공디자인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iii)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경우, (iv) 그 밖에 새로운 가치의 실현이나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열거함.
- 공모대상은 (i)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의 공모는 기획설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대

상으로 하되 기획설계에 중점을 두며, (ii) 공공용품이나 공공표지의 공모는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함.

- 공모방법은 참가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 제한공개 또는 지명초청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구체적인 공모절차에 관하여 원 하위법령(안)에서는 규정을 두었으나, 본 연구를 통한 하위법령(안)은 이를 삭제함.

11. 공공디자인 비용계상(법안 제12조) - 비 위임사항

-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그 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하위법령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비용계상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공디자인의 비용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시행규칙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비용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두고,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12.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법안 제13조제2항)

- 법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유형과 지원범위의 대강을 정하여야 하나, 그 성격상 이를 일반화, 규범화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포괄위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공공디자인 분야가 안정화되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를 예정하면서 그 원칙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는 보류하도록 함. (단 모범적 형식으로 별표 제시)

13.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법안 제14조)

- 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i) 전국단위 시범사업의 계획, (ii)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국단위 프로그램의 구상, (iii) 공공디자인 관련 표준조례안에 관한 구상, (iv)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디자인 관련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함.

14.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법안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
- 한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은 분과위원회에 기획위원회, 공간위원회, 시설위원회, 용품위원회, 표지위원회,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

Ⅱ 제3장 Ⅱ

해외법제 현황 검토

제1절 개 요

1. 개념상의 차이

- 공공디자인(public design)⁴⁹⁾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님. 각종 문헌 및 전자문서를 검색하여도 이러한 용어를 통하여 검색되는 법 내지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없음.
- 이는 이미 사회의 각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이라는 수단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임. 다만, 도시계획 등 개별적인 부분으로부터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관리되어 왔음.

2. 제도상의 차이

- 여러 국가는 디자인영역에 관하여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 보다는 기금 내지 위원회를 조성·구성하여 디자인분야의 사업이나 시설을 지원하거나 조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⁵⁰⁾ 해외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원의 방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련 행정기관 산하의 “공적인 진흥기관”을 통하여 세제혜택, 기금과 보조금의 지급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경우(핀란드의 The Arts Council, 덴마크

⁴⁹⁾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6, p.3.

⁵⁰⁾ 앞의 연구보고서, p.135-148 참조.

의 Arts Council/Arts Foundation)와, 세금혜택을 받으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자문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공공공간의 디자인 환경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경우(뉴욕의 Design Trust)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州 또는 연방차원에서 “비용계상”을 통한 공공사업의 총괄관리 프로그램 또는 공적 자산관리 및 운영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미국의 Capital Improvement Program)와, 환경부 등이 공공공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행하는 경우(영국의 Design Guideline)로 나눌 수 있음.

제2절 외국의 법제 및 정책현황

1. 미 국

- 미국 연방법제에서 “public design”의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U.S.C. title 40에서 “공공사업(public work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이외의 작품 및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금을 집행하는 전형적인 민간주도형 디자인 진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⁵¹⁾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공간과 환경에 관한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한데, 뉴욕의 디자인트러스트(Design Trust for Public Space)가 대표적임. 디자인 트러스트는 1995년 설립 이후 뉴욕의 공원, 광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의 계획에서부터 공공건축물, 거리 등의 도시환경 개선과 발전에 기여해왔음. 또한 뉴욕시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역커뮤니티, 건축가, 도시계획가, 디자이너, 예술가, 평론가 등관 파트너십을 형성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택시07’과 같은 택시디자인과 택시를 둘러싼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이해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뉴욕시의 교통문화를 새롭게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2001년 911사건 이후에 붕괴된 WTC사이트(Ground Zero)를 중심으로 로우 맨하탄 지역의 대규모 지역재건프로젝트(Lower Manhattan Rebuilding Project)가 진행 중인데, 이는 비극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적인 미래상을 재건함과 동시에 경제회생

51) 박은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제1권, 2006, 99면.

의 을 추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 한편, 연방 차원에서 주택 및 도시개발국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설치에 대하여 조언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원하며 각 지역의 공공기관은 그 지역의 빌딩, 길, 공원, 상·하수시설을 유지·보전·향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U.S.C. title 45, chapter 21은 “예술위원회(Commission of Fine Art)”로 하여금 공공빌딩, 구조물, 공원 등이 특정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그것이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 및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상, 분수, 기념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광장, 거리, 공원의 위치와 디자인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함.
- 1990년 워싱턴주에서 통과된 성장관리법(The Growth Management Act)에 따르면, 무분별한 도시화를 억제하고 공공장소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장비율 뿐 아니라 성장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형태를 정하고 있음.
- 이 법은 합리적 토지이용, 교통, 공원 및 휴양, 하수 및 수질, 주택,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기반시설계획(Capital Facilities Plan)은 각종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에 따라 공공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생활기반시설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립되는 재정향상프로그램(Capital Improvement Plan)은 중기계획으로서 생활기반의 향상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영 국

- 영국의 법제에도 public design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디자인 및 특허법(Design and Patent Acts)에서는 §213에서 “Design”을 문서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태 및 배치로 정의하고 있음.
- 도시디자인연맹(Urban Design Alliance)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 공간은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되며 공중을 위한 디자인이 중요함이 언급되어 있음. 즉, 공중에게는 광장, 건물, 도로, 공원 등의 주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 영국의 디자인 진흥정책은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진흥기관인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을 중심으로 실행됨. ‘영국 상품의 디자인 향상을 통한 영국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영

국왕립헌장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 카운슬은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지함.

- 또한 건축위원회(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1999년 문화매체미디어부와 부총리실의 지원기금으로 설립된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부 자문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 자문과 디자인 자문업무를 수행함.
- 공간의 사회·경제·환경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서는 자체적인 심의를 거친 디자인지침(design guideline)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함.
- 디자인지침은 공간의 성공요건을 가능하는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장소에 미치는 개발의 영향 정도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리
 - 공간의 공공성
 - 공간 내 이동성
 - 접근가능성
 - 환경변화에의 적응 정도
 - 시설의 다양성

3. 프랑스

- 프랑스에서 공공공간(l'espace public)은 인간사회, 특히 도시에서 그 소유가 개인 또는 국가인자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자의 통행 및 모임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의 총체를 말함.⁵²⁾
- 이 개념은 특히 모든 자의 예술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소라면 유형적이든지 무형적이든지 불문하고 일컬어지는 경향이 있음. 오히려 최근에는 인터넷 등에서 토론이 행하여지는 모든 곳을 공공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임.
- 유형적 공간에 있어서의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 공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시민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 상태로 이해됨.
- 이는 작은 그룹화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공간적 기반을 형성하고, 그들의 관계와 그 거래(야외시장, 항구, 교통망 등), 그 보급(배수, 도수 등), 그 밀도(지역의 크기) 또는 그들의 지위(지역사회적, 기념비적, 기능적 계층화)를 법정화 하는 것을 포함함.

⁵²⁾ http://fr.wikipedia.org/wiki/Espace_public 참조.

4. 일 본

- 일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지역적 협소함은 일본인의 도구개발이 간결한 형태와 기능성을 추구하게 된 배경임. 일본의 미학과 조형관은 축소지향적이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있음. 일본의 정원이 보여주듯이 인공적인 공간미와 함께 식물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억제하는 분재는 그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전통적 조형관은 일본디자인의 축소주의, 단순성, 기능주의로 나타남.⁵³⁾
- 일본은 전국이 공공디자인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도쿄의 재개발은 미국 보스턴 시사이드(Seaside) 재개발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음.
- 요코하마시가 1971년 처음으로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한 이래, 2001년 일본 정부에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고, 2004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음.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경관법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시즈오카시에 위치한 시미즈 항은 건축·색채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어 기능별로 고유한 색채를 적용하여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일본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공공디자인을 최전방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들 수 있음. 도시 곳곳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신뢰가 중요한데,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들에 대한 설득도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일본국민 자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간판공해’를 과감히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문화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음.⁵⁴⁾

5. 중 국

- 중국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으며, 디자인은 설계(设计), 책화(策划), 화색(花色), 타도(打图), 화초(花俏)로 표현됨.
- 현행 중국법상 디자인을 직접 규정한 사례는 없고, 위에서 우리가 분류한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문화, 출판, 영화, 위생, 관광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공

⁵³⁾ 김연주·권영걸, “문화지향적 디자인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제1호, 2006, p.11.

⁵⁴⁾ 매일경제 “공공디자인 강국 일본서 배우자”, 2007년 11월 23일자.

장소, 공공시설, 광고 등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음.

○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⁵⁵⁾

- 양호한 공공장소의 위생조건, 질병예방, 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에서는 공공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호텔(宾馆), 식당(饭馆), 여관(旅店), 숙박시설(招待所), 다방(咖啡馆), 술집(酒吧), 찻집(茶座), 목욕탕(公共浴室), 이발소(理发店), 미용실(美容店), 영화관(影剧院), 오락장(游艺厅), 무도장(舞厅), 음악장(音乐厅), 체육장(体育场), 수영장(游泳场), 공원(公园), 전람관(展览馆), 박물관(博物馆), 미술관(美术馆), 도서관(图书馆), 시장(商场), 서점(书店), 대합실(候诊室), 공공교통기구(公共交通工具)
- 그리고 이러한 공공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에 관하여 국가위생성표준을 만족하여야 함.
- 공기(空气), 미소기후(微小气候), 온도(湿度), 습도(温度), 풍속(风速), 수질(水质), 채광(采光), 조명(照明), 소음(噪音), 손님용구 및 위생시설(顾客用具和卫生设施)

○ 선전(深圳)시 계획표준·준칙⁵⁶⁾

- 본 준칙에서는 공공시설을 사용기능에 비추어 다음 8가지로 분류함.
-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문화오락시설, 체육시설, 사회복리·보장시설, 행정관리·지역사회서비스시설, 상업시설, 시정공용시설

○ 상해시 공공문화관관리법⁵⁷⁾

- 이 법은 상해시의 공공문화관관리를 보강하고, 공공문화관을 통한 시민의 문화소질과 상해시 문명수준을 제고하며, 문화사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 이 법에서는 공공문화관을 공중에게 개방하고, 군중문화활동의 공익성문화산업단위를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문화관이라고 정의함.
- 문화관에는 시문화관, 지역문화관, 거리문화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상해시 옥외광고설치관리법⁵⁸⁾

- 본 법은 상해시의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됨.
- 이 법에서 “옥외광고”는 공공, 자신의 소유 혹은 타인의 소유 건축물, 구조물, 공터(운동

⁵⁵⁾ 公共场所卫生管理条例

⁵⁶⁾ 规划标准与准则

⁵⁷⁾ 上海市公共文化馆管理办法

⁵⁸⁾ 上海市户外广告设施管理办法

장), 공간 등(이하 총칭하여 진지라 한다)에 도로표지판, 가로등(灯箱),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판(电子显示牌), 간판, 상표, 실물조형물 등을 설치한 옥외상업광고라 정의함.

○ 상해시 성시조소건설관리법⁵⁹⁾

- 이 법은 상해시 조소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해시의 조소질량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성시조소”는 상해시의 도로, 광장, 기차역, 부두, 공항, 체육관, 공공녹지, 공원 등 공공장소, 및 거주구역 등의 개방구역 내의 독립형상 조각 작품으로 정의함.

○ 상해시 인민광장지역 종합관리잠행규정⁶⁰⁾

- 상해시 인민광장지역의 종합관리를 보강하고, 인민광장지역의 정상질서를 수호하고, 도시의 모습 및 공공시설의 온전함을 위하여 마련된 본 규정에서는 “광장지역”을 상해시 특정 범위 내의 공공구역으로 정의함.
- 본 규정은 광장에 진입하는 단체나 개인이며, 도로교통시설, 공공사회질서, 녹화, 환경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두고 있음.

⁵⁹⁾ 上海市城市雕塑建设管理办法

⁶⁰⁾ 上海市人民广场地区综合管理暂行规定

Ⅵ 제3장 Ⅵ

법률(안)과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의 3단 대비표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표지(標識) 등의 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제*조(정의) 법 제2조제2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정</p>	

	하는 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표지(標識) 등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가능한 사회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설치되어 그 용도를 증진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용품”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국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4. “표지”라 함은 공공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상징적 기호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 · 문화 · 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 · 창의성의 추구 4. 이용과 접근의 편의		

5. 국가이미지 및 지역특성의 고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의 재산권의 보호와 산업화에 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개발의 지원과 관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2조제		

<p>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종합계획은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u>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제8조(공공디자인의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조화를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조(공공디자인의 협의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의 조화에 관한 협의는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 및 일정 등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덧붙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역할분담·비용부담·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수 있다.	제*조(다른 계획 등의 고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디자인과 관련하여 당	

<p>③ 제2항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다른 시책 또는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p> <p>제*조(구상 등의 공표)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범적 구상 또는 표준안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1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채용)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계획·추진 및 관리 등 해당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p>	<p>제*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또는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채용한다.</p>	
<p>제11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p> <p>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디자인안이 단순하거나 그 응용이 부적절한 경우 2. 공공디자인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p>개선의 필요성이 큰 경우</p> <p>4. 그 밖에 새로운 가치의 실현이나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1.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의 공모는 기획설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설계에 중점을 둔다.</p> <p>2. 공공용품이나 공공표지의 공모는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p> <p>③ 공공디자인의 공모는 참가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공개, 제한공개 또는 지명초청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제12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표지(標識) 등의 제작·설치 비용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게 그 대상과 비율을 고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 공공디자인의 연구·개발 3.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제		

<p>협력 및 교류</p> <p>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조(시범사업의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과 지원범위·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p>	
<p>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p> <p>제14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및 조정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제*조(심의사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단위 시범사업의 계획 2.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국단위 프로그램의 구상 3. 공공디자인 관련 표준조례안에 관한 구상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디자인 관련기구와의 협력 	
<p>제1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p>		

<p>구성)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공동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자가 공동으로 한다.</p> <p>③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p> <p>2. 민간위원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p> <p>④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p> <p>⑥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조(당연직위원) 법 제15조 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은 다음 기관의 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부 2. 건설교통부 3. 산업자원부 4. 행정자치부 5. 환경부 6. 정보통신부 7. 해양수산부 8. 농림부 <p>제*조(분과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위원회 2. 공간위원회 3. 시설위원회 4. 용품위원회 5. 표지위원회 6. 지방위원회 	
<p>제16조(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 계획, 지역의 공공디자인에</p>		

<p>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	--	--

[별표1] 법 제3조 관련 : 공공디자인의 적용범위

대 상		범 위
공 간	옥외공간	가. 광장 나. 공원 다. 녹지 라. 유원지 마. 공공공지 바. 하천 사. 가로 아. 야외주차장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사무소, 연수원) 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의료원, 복지관, 학교, 연구소, 시민회관, 구민회관) 라. 정부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항, 항만, 운하)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동·식물원) 바. 공설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공작물	지하대피호, 첨탑
시 설	옥외공간 관련시설물	가. 조경시설물(화단, 분수, 조각) 나. 휴양시설물(휴게소, 매표점, 화장실) 다. 유흥시설물(그네, 미끄럼틀) 라. 관리시설물(매표소, 출입문, 울타리, 주차관리소) 마. 문화관광시설물(관광안내소, 동상·기념비) 바. 도로구조물(교량, 철교, 고가차도, 입체교차)
	공공건축물 관련시설물	가. 공동구(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나. 안전시설물(승강기, 방재시설, 방화시설) 다. 문화시설물(실내인테리어, 공공미술품)
	가로시설물	가. 교통관련시설물(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가드레일,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도블럭, 가로등) 나. 편의시설물(휴지통, 공중전화, 벤치, 음수대) 다. 가로녹지시설물(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라. 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공공물품	가. 공공기관소유 차량 나. 제복 다. 가구

용 품		라. 문구
	공공서식	가. 법정 민원서식(안내서, 신청서, 위임장, 상장, 각종 등본, 초본, 대장) 나. 정부간행물 (도서, 도면, 홍보물) 다. 홈페이지, 전자문서
	대민 서비스용품	가. 재난대비용품 나. 민방위용품 다. 무인사무처리기
표 지	상징물	가. 국가의전 상징물 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다. 지역행사 상징물
	인증물	가. 여권 나. 주민등록증 다. 자격증 라. 상장 마. 화폐 바. 우표 사. 자동차 표지판
	교통 안내표지	가. 경계표지(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나. 이정표지(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다. 방향표지(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라. 노선표지(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마. 기타표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지 중 관광지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매표소표지)
	옥외 광고물	간판, 전광판, 현수막, 벽보

[별표2] 법 제13조 관련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범위·절차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p>가.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표지의 개선을 위한 사업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도성 -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 그밖에 유사한 사업 <p>나.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일 것 -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p>다. 지원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행정, 기술,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지원 	<p>가.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명시된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증명)하는 서류 - 시범사업계획서(시범사업의 내용, 소요예산, 사업계획 참여자, 자문위원 명단 포함) - 지정을 요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시범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내역서 - 주민의견청취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p>나.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당해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작성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p>가.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초 확립을 위한 DB 구축 - 공공디자인 실행 과정개발 - 공공디자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 연구 -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및 품질관리 등의 평가 방안 연구 - 국내외 모범사례 연구 -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연구 - 그밖에 유사한 연구 <p>나.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의 적합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그 밖에 ‘연구과제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p>다. 지원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지원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p>
공공디자인 국제협력 및 교류 지원	<p>가.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박람회 개최 - 공공디자인 해외 전시 참가 지원 - 공공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 공공디자인 해외홍보 지원 - 해외단체와의 양해각서(MOU)교환 지원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p>

참고문헌

- 간판과 디자인 심포지엄 (2002), 『우리의 간판 무엇이 문제인가』
- 경기지방공사 (2005), 『택지 및 산업단지 내 가로환경시설물 표준디자인 연구』
- 공공디자인 대국민 정책 토론회 (2006), 『쾌적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5), 『공공디자인의 질적 선진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향상 방안』
- 문화관광부 (2006),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산업자원부(2005),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산업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200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 산업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2001), 『국내 시각디자인 요율 표준화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 방식과 디자인료 산출 방식 연구』
- 산업자원부(1999), 『21세기형 국가 디자인 육성전략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서울마케팅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도시 브랜딩을 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연구』
- 서울특별시 (2003), 『가로환경디자인개선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2005), 『2005 정기국회 정책보고서-21세기 혁신 코드, 디자인』
- 21세기 국가경쟁력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2005),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본 통상산업성 생활산업국 디자인정책실 (1999), 『일본 디자인 정책의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공공디자인전 매력적인 대한민국 만들기』
- 한국디자인진흥원 (1997.12~1998.12), 『디자인 정보교류회 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 한국산업디자인협회 (1998), 『디자인용역 표준계약방식과 디자인료 산출방식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디자인기술공학연구센터(2005),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문화인프라 구축 기본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자료집

- 강성중·최성호 (2006), 도쿄 롯폰기힐즈의 스트리트 퍼니처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1), 43-53.
- 강현주 (2006),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너의 역할,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6 하계 학술대회*, 5-11.
- 강현주·김영철·박해천(2005), '한국의 디자인', 시지락
- 고성중·고필중 (1992), '도시와 환경디자인', 미진사
- 고필중·장은석(2001), '도시환경과 거리가구 디자인', 미진사
- 권명광 (1997), 디자인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국회 사무처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 김도경 (2003), 지역이미지의 상징성 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 연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6(1), 63-72
- 김득곤 (2004), 도시가로시설물의 정책과 지역이미지 정체성 표현 연구, *용인대학교 조형논총*, 제9권, 24-46.
- 김득곤·형성은 (2004), 도시 내 가로시설물의 이용자 심미성 평가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조형논총* 제5권, 23-38.
- 김미연·최진원(2003), 가로경관 조명설계를 위한 건축물 외관유형과 경관조명방식과의 상관관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0호
- 김민수 (2002), '김민수의 문화 디자인', 다우
- 김연주·권영걸 (2006), 문화지향적 디자인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1), 5-16.
- 김영배 (2001), '장사가 되는 간판, 안되는 간판', 시지락
- 김영기 (2002), '디자인 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종인·장광집 (2004), 장소마케팅을 통한 가로환경시설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7(1), 5-14.
- 김주석 (200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규제와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김학민·최성호 (2006), 도시 시각정체성의 문화지향적 공공성 확립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2), 39-47.
- 김현선 (1997),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연출 기법, *도시문제*, 32(345), 44-57.
- 김현숙 (1997), 가로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6), 131-153.
- 김효정 (2004), '문화도시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나루미 구니히로 외, 도시디자인연구회 역 (1997), '도시디자인수법', 새날

- 리처드 부캐넌 · 빅터 마폴린 (2002), '디자인 담론', 조형교육
- 목정훈 (2005), 미국의 경관보호시책과 시사점,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 민범식 (2005),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향연구', 국토연구원
- 박은실 (2006),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1), 91-102.
- 박은실 (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17집, 11-33.
- 박응격 (200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법적 규제와 정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2(2), 53-84.
- 박재연 (2005), 디자인경영 전략을 위한 다중 디자인정책 체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승우 (200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택 (1999), '지역문화 특성화를 위한 캐릭터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덕성 · 정태일 · 박천보 (2001), 도시경관 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지역개발논총
- 윤민희 (2003),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 이상민 (2006), 『환경과 조경』을 통해 본 현대 한국 조경설계의 경향, *공공디자인학연구*, 1(2), 85-95.
- 이인성 (1983), 가로환경의 분석을 위한 총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형 (2004), 일본에서의 경관시책과 경관법제정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 이정훈 (2005), 공간정보의 효율적 인지를 위한 시각정보 디자인 시스템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지영 · 권영걸 (2006), 경관 아이덴티티 형성인자로서 옥외광고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1), 55-64.
- 예술의 전당 (2002),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디자인미술관
- 정봉금 (2006),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연구: 국가 디자인 진흥전략과 지원 시스템에 관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주 (2006),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국내 도시상징물의 조성경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2), 49-57.
- 조경진 (2006), 가로환경 디자인의 총체적 접근: 가로시설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학연구*, 1(1), 29-42.
- 조경진 (2005), 도시의 가로 · 도시의 문화, *환경과 조경*, 209호, 144-147.
- 조경진 (1997), 보도환경의 문제와 과제, *도시문제*, 32(345), 58-70

- 지상현 (2007), '디자인의 법칙', 지호
- 차승화 (2006), 도시 미관을 위한 국내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 연구*, 1(2), 5-16.
- 최성호·김학민 (2006),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본 국내 지하철 노선도의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1), 65-80.
- 황기원 (2002), '도시 디자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남 국제 디자인 포럼 자료집, 한국디자인 진흥원
- '간판 정비·담장 허물면 재정지원', *한겨레신문*, 2006년 7월 19일
- '거리 간판이 아름다워진다: 도시경관 프로젝트(간판, 현수막)', *매거진 정글*, 2007년
- '공공디자인 도시를 바꾼다' 연재기획기사, *동아일보*, 2004년 5월 3일자~5월 7일자
- '공공표지, 사회 변화 제대로 반영 선진화하자', *세계일보*, 2007년 7월 4일자
- '광고신도시, 간판부터 다르다', *업코리아*, 2007년 8월 21일자
- '광주시, 전국 첫 공공디자인 조례 입법예고', *연합뉴스*, 2007년 7월 1일자
- '구리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데일리안 뉴스*, 2007년 7월 6일자
- '국내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를 돌아본다', *월간 팝사인* 2007년 5월호
-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연재기획기사, *중앙일보*, 2006년 7월 24일자~2007년 9월 14일자
- '농·산·어촌마을도 디자인 개념 도입, *서울신문*, 2007년 8월 28일자
- '디자인 서울 거리에서부터 시작', *YTN 뉴스*, 2007년 8월 22일자
- '도시경관 프로젝트(간판, 현수막)', *매거진 정글*, 2007년
- '매력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 소프트 시티로', *매거진 정글*, 2007년
- '못생긴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적', *미디어다음*, 2006년 2월 14일자
- '부산시 도시디자인정책 시작이다', *뉴시스*, 2007년 8월 17일자
- '빨간색 간판 규제; 업체 비상', *동아일보*, 2001년 12월 17일자
- '서울메트로, 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아름다운 서울메트로만들기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07년 7월 10일자
-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연합뉴스*, 2007년 8월 27일자
- '서울시 디자인조례 개정', *해럴드경제*, 2007년 7월 12일자
- '서울시 2010년까지 '디자인거리' 25곳 조성', *연합뉴스*, 2007년 8월 22일자
- '선진국선 60년대부터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 *한국경제신문*, 2007년 8월 29일자
- Akio, H.(2002), *Trials of Urban Design in Setagaya City (Japan)*,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Alpay, ER.H.(2002), *Does Design Policy Matter?: The Case of Turkey in a Conceptual*

- Framework,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Darlie, O.K.(2002), Broadbanding Design Policy & Promotion: Focus On The Region and India,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Leimei, J.C.(2002), Cultivating the Design Mind: How Japan transformed itself into one of the world centers for design,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Park, H.M.(2002), The Development Program for Design Model Cities In Korea: Making cities with their own identities,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Peter, J.(2002), Design Promotion between National Orientation and Globalisation,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Anderson, S. (1974), Peopl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Urban Ecology of Streets, On Street, Cambridge, The MIT Press, 1-11.
- Chung, K.W.(1998), Strategies for Promoting Korean Design Excellence, *Design Issues*, 14(2), 3-15.
- Ellis, W.(1974), The Spatial Structure of Streets, On Streets, Cambridge, The MIT Press, 114-131.
- Habe, R.(1989), Public design control in America communities, *Town Planning Review*, 60(3), 195-219.
- Moudon, A.V (1991), Public Streets for Public Use, Columbia University Press
- Punter, J.W.(2002), Urban Design as Public Policy: Evaluating the Design Dimension of Vancouver's Planning System,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Vol.4, 265-282.